

민주 내일 당대표 선출… 정청래·박찬대, 막판 표심 공략

정 “당심만 믿어”…공개일정 없이 전화로 대의원 등 접촉
박 “대의원 적극 투표할 것”…당원 주류 4050 참여에 사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투표를 반영해 신임 당 대표를 뽑는다. 해당 득

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합산한 것으로 대의원·일반 국민 투표 결과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기존 ‘순회경선’에서 ‘통합경선’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진행된 충청권, 영남권 경선에 이어 지난 30일부터 호남권과 경기·인천·서울·강원·제주권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제도적으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은 당초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비율이었으나, 이번에 권리당원 비중이 15%p 늘어 55%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대의원 비중은 15%로 낮아졌다. 대의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약 1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권리당원은 111만1000여 명이며, 이 중 호남 권리당원은 35만여 명으로 3분의 1 가량을 차지, 경선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31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심을 이길 정권은 없고, 당원을 이길 당권은 없다”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21.88%로 경기·인천(36.05%), 서울·강원·제주(31.18%)에 못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

에 참석한 뒤 ‘전국 청년 릴레이 지지 선언’에서 세몰이에 나선다.
앞선 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에게 밀렸지만, 여론 조사상 청년층이나 여성 지지율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하다는 게 캠프의 판단이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40~50대 주류 당원보다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 역시 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법인세 전 구간 1%p ↑
배당 분리과세 최고 35%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p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원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튿날 오후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기재부는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 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습대에 올랐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 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갑예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p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책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순수한 이자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광주시 아동친화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시, 광역시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

아동친화정책 선도도시 강화·아동권리 실현 메시지 전파

광주시가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 선도도시로 새롭게 출발한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한 성과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은 ‘최초 인증’ 후 4년간 아동 관련 정책에서 성과를 낸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기존의 최초인증이나 단순 인증경신과는 차별화되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 권리 보장과 안전한 아동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추진해왔다.
광주는 이번 인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

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전 지역 인증을 달성한 도시가 됐으며, 광역·기초 간 협력형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아동·청소년의회를 분리해 아동 참여를 확대했고, 광역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직선제로 구성했으며, 이들이 제안한 정책 69건 중 68%를 시정에 반영했다.
아동참여예산제 17건도 실제 사업화했으며, 아동권리감사 양성,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개발, 손자녀 돌보미, 초동학부모 10시 출근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형 G패스 교통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했다.
이같은 성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친화환경 조성 노력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은 광주시교육감, 최지현·이명호 광주시의원, 김영권 광주경찰청 경무관,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읍무브퍼슨, 아동·청소년 및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시청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난타, 합창), 아동친화도시 추진영상, 아동권리현장 낭독, 상위인증 선포 및 인증서·현판 전달, 인증 퍼포먼스 ‘매직트리’, 아동친화정책 소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상위인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지역 노인 96%, 소비쿠폰 ‘긍정’ 평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문…83.7% 생활용품 구입 활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지역 노인 시설 이용자 83.7%가 식품 등 생활용품에 구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쿠폰 사용 경험에 있는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쿠폰 활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80.8%는 민생회복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받아들였으며, 15.4%는 ‘심리적 위로로 느꼈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96%가 쿠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2.3%는 ‘쿠폰이 없었다면 해당 소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4.6%는 쿠폰을 받은 뒤 ‘정부 정책과 시정에 관심이 생겼다’, ‘사회에서 나를 챙겨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응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3.3%는 70~80대였지만, 92.3%가 스스로 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한 쿠폰 형태는 선불카드가 53.8%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카드 36.5%, 지류 형태 9.6% 등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사용상의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가게 쿠폰 사용 거절 우려 32.7%,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 8.7% 등을 예로사항으로 꼽았다.
쿠폰 사용처로 고려한 요소로는 이용 장소와의 거리가 50.9%로 가장 많았고 사용 가능 여부 24%, 가격 간식이 32.7% (이하 복수응답)로 뒤를 이었다. 사용처는 동네 가게 및 마트가 55.8%, 전통시장이 47.1%로 나타나 소비 유발뿐 아니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도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온함’

인권 보호 긴급 후속대책 마련

전남도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이후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만나 위로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총 7개 과제로 이뤄졌다.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첫 번째로 추진되는 실증사업이자, 지역 최초 민간연 협력 사례로 기술과 산업,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MW급 실증플랜트 확장과 연계한 국가사업 확보를 통해 전남이 청정수소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착수한다.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관합동 직접 대면 방식으로 추진되며,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와 주거환경 등을 폭넓게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계절근로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8월에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문가, 유관기관, 이주노동자 단체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후속대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유관기관, 고용주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국내 최초 고온 수전해 실증 나선다

현대건설(주) 등 기업 참여 시스템 모듈 실증 업무협약

전남도는 30일 영광에서 영광군, 전남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현대건설(주), (주)미코파워와 100kW급 고온 수전해 시스템 모듈 실증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 최초 고온 수전해 실증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영광군은 수전해 실증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 전남테크노파크와 고등기술연구원은 인프라 운영과 안전관리, 미코파워는 모듈 공급과 운전, 현대건설은 설계·시공과 시운전 등 기관별 역할을 기반으로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실증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100kW급 고온 수전해 시스템 모듈을 MW급 산업 현장 규모로 확장 적용하기 위한 시험 운전이다.

수전해란 물(H2O)에 전기를 가해 수소(H2)와 산소(O2)로 분해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청정기술이다.
이 가운데 고온 수전해(SOEC)는 600~850℃의 고온에서 수증기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수전해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경제성과 실용성이 매우 뛰어난 차세대 수소 생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실증이 진행될 ‘수전해시스템 성능평가센터’는 영광 대마산단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구축된 전국 유일의 공공 테스트베드다. 이 센터는 기업이 직접 MW급 수전해 시스템을 장기간 실증하고, 성능을 검증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세계 수전해 시장 규모는 2024년 57억 달러에 이른다. 2032년 18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전해 시장 규모는 2024년 5480만 달러에서 2032년 5억 달러로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그린수소 정책에 따른 국내 수소산업 핵심 기술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무탄소 전력 기반의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고,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구축해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수전해 성능평가센터 구축 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실증사업이자, 지역 최초 민간연 협력 사례로 기술과 산업,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MW급 실증플랜트 확장과 연계한 국가사업 확보를 통해 전남이 청정수소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